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관계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으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해양국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한편,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4.03) 발표자료

목 차

1. 시진핑의 국가대전략
가동과 대외정책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진화
 - 가.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정책
 - 나. 북중관계
3. 총론: 한국의 대응
 - 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구성
 - 나. 정책 방향: '연미협중
(聯美協中)' 전략의
추진
 - 다. 중국과 적극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도전을 기회로 전환
 - 라.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
 - 마. 북한 문제 주도권
확보는 대중 레버리지
를 강화하나, 현 단계
에서는 국제공조가
우선시되어야 함

1. 시진핑의 국가대전략 가동과 대외정책

- 중국 외교의 정체성 변화
 - 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변화가 진행 중임. 시진핑 시기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전문가조차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변화의 요인으로는 우선, 중국의 자아정체성의 변화가 중요함. 중국의 주류 전략사고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한 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은 '대륙국가'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대륙-해양국가'로 정체성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은 물론, 미국과도 전략적 갈등도 강화되고 있음
 - 또 다른 주목할 변수는 국내정치 변수임. 시진핑은 권력정당성 강화와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중국 외교는 기존의 '도광양회'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유소작위(有所作爲)'나 '주동작위(主動作爲)'와 같은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광역적·전략적·능동적이며, 전문화되고 보다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는 중임
 - 현재의 중국은 국익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마지노선(底線)을 설정하여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권보다 강함
 -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지역 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대전략을 추진하는 '유라시아의 허브 국가', '중양 국가'가 되고자 함
- 국가 대전략의 추진
 - 중국은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 일명 BRICS 은행이라 불리는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과 위기대응기금(CRA: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설립,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수립 등을 제시하여 대미(美)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한 수정 요구 및 제도·규범 경쟁 단계로 진입
 - 러시아·중앙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신 육상 실크로드와 더불어 인도·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아라비아 해·아프리카 등을 연결하는 신 해상 실크로드를 구상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 중
 - 유라시아 대륙에서 교통·무역·경제협력·인적교류의 중심지로 부상한다는 계획

- 중국 안보의 취약점인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게 확보하려 함
- ‘일대일로’ 전략 사업의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 은행’ 설립. 미국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참여시킴으로써 예상 외의 극적인 성공을 거둠. 이는 아마 미중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개연성 다대
-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에서 시진핑은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국가 중심의 ‘신안보체제’ 수립을 제안

○ 신형강대국관계의 추진

- 시진핑은 ‘불충돌과 불대항’, ‘상호 공영’, ‘상호 존중’의 3원칙을 제시
- 시진핑 시기 들어 적극 제기하고 있는 ‘신형강대국관계’의 주 대상은 미국이지만 다른 강대국 관계에도 확대 적용
- 이는 첫째, 중국은 미국의 국제질서 안에서 비군사적 방식으로 미국과 계속 경쟁을 하겠다는 것임
- 둘째, 중국의 새로운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상호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요구
- 셋째, 상호 핵심이익 혹은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사안은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것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원칙상 이 관계의 설정에 공감하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하기를 꺼려하고 있음. 특히 ‘상호 존중’ 부분은 여전히 합의가 어려움

○ 주변국 외교의 강화

-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는 주변국 외교를 크게 중시
- 대주변국 전략의 세분화 및 능동적인 대응을 추진. 필리핀·베트남·북한과 같이 중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무력을 포함한 압박을 강화하고, 일본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으며, 한국·몽골이나 중앙아·동남아 국가들과 같이 경계선에 있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펴고 있음
-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의존 관계를 지니고, 문화적 영향력이 강하면서도, 국가 역량이 있어 중등 수준의 거점국가(支點國家)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 노력함. 예를 들면, 동북아에서는 한국, 동남아에서는 태국·말레이시아, 중앙아에서는 카자흐스탄 등이 있음
- 중국은 2013년, 이미 20여 주변국의 국가원수나 정상들과 정상급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4년 한국, 몽골 방문처럼 이전 관행과는 달리 단독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과감한 점혈(點穴)외교를 추진함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는 광역적, 전략적, 능동적이며, 전문화되고 보다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어...

**강대국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

- 미국과 중국: 새로운 단계의 경쟁 돌입
 -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핵심이익을 국제무대에서 상호 지지해 주기로 합의
 - 미국이 공들이고 있는 몽골·미얀마·인도·베트남과의 관계를 재강화하여 미·일의 견제를 상쇄하려는 움직임 강화
 - 미국은 이에 대응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신남방삼각(미·일·호) 혹은 다이아몬드 제휴체제(미·일·호·인)를 형성하려 하고 있음
 - 중국은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 수립 구상’처럼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수립을 제안하였고, 이는 향후 국제규범 영역에서도 예상보다 빨리 미중관계가 새로운 격량의 단계로 진입할 것을 의미함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하고 긍정적인 미중관계를 설정하는 데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세일가스 혁명과 인구 구성의 이점 등에 기반하여 ‘Pax-Americana 3.0 시대’로, 동시에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새로운 개혁정책과 과감한 제도적 창의를 통해 ‘중국의 부상 2.0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 향후 국제정세는 ‘독수리’와 ‘용’이 동시에 병진적으로 날아오르는 형세임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화

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강대국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중
 - 중국은 강대국이고 남·북한은 약소국으로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존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사고
 - 북한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추진한다는 방향은 이미 후진타오 시기에 제정하였으나, 시진핑 시기 들어 이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함

- 최근 중국 내부의 대한반도 전략 사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지정학적인 사고를 넘어 점차 지정학적인 사고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전략 차원에서 지역 중견국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발견(거점국가론)하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기반한 남·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

는 경향

○ 중국식 한반도 신균형자론

중국은 기존의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한중관계를 보다 독립적인 시각으로 인식. 남·북한에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남·북이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균형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접근법으로 전환

- 중국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하여 미국과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중립화를 추동하려 노력
- 2014년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방문하기 이전에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 중심으로 한반도를 이해하던 사고에서 분명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정향이 강화

- 후진타오 시기에는 한반도의 통일은 양안 통일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오며, 양안의 통일이 전제되어야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반면, 최근에는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양안의 통일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로 전환하는 추이가 존재
- 한국 주도로 통일하는 경우라도 미일 대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적어도 한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담론도 크게 증가함. 하지만 그 최종 판단은 여전히 미국 국내정치에의 향배, 미중관계 및 한중관계 등의 변수와 영향을 주고 받을 것임
- 이러한 사고 전환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까지 중국 통일에 극적인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진핑의 노력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임

**중국은
균형자 역할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중립화를
추동하려고 노력**

나. 북중관계

1) 후진타오 시기의 대북정책 초점

○ 개발도상국 외교와 ‘안정’ 중시의 대한반도 정책의 확립

- 당시 중국 지도부는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정책은 봉사해야 하며, 대외적 불안정 요인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었음

○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는 21세기 초 갈등이 고조되고

중국은

**약소국인 북한의
외교에 강대국인
중국이 이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환**

불안정한 양안관계였음. 중국은 양안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불안정이고 조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으며,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은 양안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하였음

2) 시진핑 시기의 대북정책 전환

- 중국 외교의 DNA 변화와 북중 정상 국가관계 추진
 - 북한에 대해 전략적 동업자라기보다는 강대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약소국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
 - 중국 중앙대외연락부가 전통적으로 주관한 대북 문제도 이제 외교부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음
 - 약소국인 북한의 외교에 강대국인 중국이 이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취함
 - 중국의 이익을 위배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비용을 증가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을 재평가하였고,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됨
 - 북핵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북·중 정상회담의 전제조건
 - 북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압박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강화
 - 북핵 관련 대북 재제조치 목록 확대
 - 대규모 국가 단위 경제협력 자제. 단, 소규모 및 민생 차원의 교류는 허용하였고 최근 들어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은 허용하는 유화책 허용
 - 지역경제 차원에서 북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심화
 - 북한은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여 대중 경제의존 다변화 시도 중
-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국익과 관련하여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존재함. 기존의 북중 특수관계의 관성과 담지자들과 유제들이 아직 남아있음
 - 중국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안정성 유지 및 공고화, 북한 급변사태의 방지,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임
 - 여기에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가 부재하기 때문임.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지속,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통일시 반중 정권의 수립 가능성, 통일 이후 만주 등 영토 문제 제기 가능성, 한반도 통일이 중국 통일에 장애로 전환될 개연성 등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임

- 중국 내 군부의 대북인식 변화 현상
 - 전 난징군구 부사령관 왕홍광 장군(국가이익 중시)과 전 국무원발전연구중심한반도센터 주임 리둔치우(전통관계 중시) 사이 대북정책 논쟁
 - 2014년 2월 현역 공군 중교 왕상의 제등계획(조선반도 전략보고서) 내용
 - 한반도 상태 최종 목표: 통일, 번영, 민주, 비핵, 중국에 우호적인 한반도
 - 한반도 통일 6대 선결조건:
 - ① 구속력 있고 높은 수준의 영구평화협정 체결
 - ② 영토 및 영해 분쟁을 철저히 해결하여 향후 불안정성 제거
 - ③ 비핵화
 - ④ 외국군대 철수 시간표 제시
 - ⑤ 한반도 재건사업에서 경제이익 확보
 - ⑥ 미국의 보증, 미·중 및 한·미·중 3자협정 체결
 - 대한반도 정책의 마지노선과 Red Line(紅線) 설정. 마지노선 구축은 한반도 관련 구체적 시나리오 작성 필요

- 북한 문제는 한중 간에 여전히 이견과 불신이 커 향후 중대한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재진행형이며 진화 중임
 - 중국은 현재의 구조적인 조건에서는 한국이 기대하는 바처럼 북한을 포기하는 전략적인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일 것임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균형외교에 있으며, 일방에 편향적이기보다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에 있음
 - 중국은 현 북한 상황을 ‘생존-번영’의 틀에서 인식하면서 북한에게 번영하기 위해서는 핵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 중
 - 대신 한국은 북한을 ‘붕괴-생존’의 틀에서 인식하면서 흡수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한중 간 양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음

3) 북중관계 전망

- 북핵 문제는 미중 간 신형강대국관계의 가장 시범적인 협력사안으로 부상 ⇒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완강히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북한 측의 태도 변화 없이는 당분간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미약함
 - 김정은의 전략적 오판, 미숙성, 대담성 등이 추후 한반도 안보 정세에 더 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 중국에 대한 존중이 없는 김정은에 대해 교훈을 주겠다는 의지가 분명함

**중국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완강히 요구하고
있어서 북측의
변화 없이는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낮아...**

시진핑 외교의**탈미국화 현상과****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충돌로****미중관계가 악화되면****북한의 전략적 가치는****다시 상승 가능**

-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와는 별개로 북한과 전통적인 선린우호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정립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추진할 것임
 - 북·중 지도부는 기싸움 중이나 북한이 지나치게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방지하려 할 동인이 크기 때문에 2015년 인적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조심스러운 접근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 마지노선 구축도 병행할 것임
 - 여기서 마지노선이란 Red Line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것을 말함
 - 일단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압박을 병행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흘려 북의 행동을 억제할 것. 이 경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임
 - 북한 내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은 크게 배가되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및 교류를 하고자 하는 인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음
- 시진핑 외교의 탈미국화 현상과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충돌로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다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

4) 2015년 중국의 대북 접촉과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

- 러시아 개최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식(2015.5.9)에 북·중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는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불편한 중국과 북한 관계 및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압력과 같은 변수가 있음
 -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러시아에서의 북중 간 어색한 조우를 회피하기 위한 최근 중국의 노력은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판단됨. 중국 측의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 압력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 중국의 진퇴양난과 대러 및 대북 압력
 -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와는 달리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적극 수용하면서 북한이라는 약소국이 중국의 이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함
 - 특히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북중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해 외교 다변화 및 버티기로 맞서고 있음
 - 최근 북한의 강화된 대중 비난은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됨. 중국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 일 것임

-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에서 김정은과 어색한 대면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어 아직 그 귀결이 불확실한 상황. 교섭 결과 북한은 김정은 대신 김영남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파견할 개연성도 여전히 존재함
 - 중국은 현재 한국과의 관계에서 대북 정책을 놓고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에 놓여 있음
- 중국 항일전승기념 70주년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얼마나 중국이 만족할 만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 여부와 관련이 있어 아직 가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
- 시진핑의 새로운 정체성에 입각한 강대국 외교는 과거처럼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북한이 우선적으로 출구를 제공하여야 하나 김정은 역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어 북중관계는 단기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움
 -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하거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북중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임
 - 중국은 북한이 금년 하반기 한반도 국면을 전환하고자 도발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금년 여름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다대
 - 한편,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중국은 타협책으로 북한에 핵프로그램을 우선 동결하는 선언을 하고,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 및 북미회담에 임할 것을 종용하고 있음
 -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개연성이 적어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방러시 김정은 면담 문제부터 항일전승기념식에 초청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딜레마에 빠져 있음

한중은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 양국의 핵심이익과 전략적 이익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양국공동의 비전을 구축해야...

3. 총론: 한국의 대응

가. 21세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구성

- 한·중은 기존의 냉전적이고 진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양국의 핵심이익과 전략적 이익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양국이 윈-윈하는 공동의 비전을 구축해 나가야 함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정책은 미국과
전략적 갈등이
강화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 조정이 불가피**

- 최소한, 현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원칙을 견지해야 함
- 향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한·중 모두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상호 인식과 이해를 조정해 나가면서 공동의 목표와 정책을 추진할 전략 대화를 시작할 시기가 도래함
- 한·중은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서 중국이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유라시아 지역의 구상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전제로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새로운 단계의 협력을 추진해야 함
- 양국은 기존의 동반자 관계를 넘어서 전천후적인 선린우호협력관계로 진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정책을 제안함.

나. 정책 방향: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의 추진

- 박근혜 정부 초에 강조했던 연미화중 전략은 역대 세력전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지만, 중국의 대미정책은 여전히 온건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음
 - 한국은 상승하는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여 중국과 갈등의 영역은 최대한 과감히 축소시키는 ‘구동축이(救同縮異)’ 정책을 추구할 것을 제시함
-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미정책은 미국과 전략적 갈등이 강화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 조정이 불가피함
 - 중국과 ‘구동축이’ 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중국이 새로이 시도하는 유라시아 국제체제 형성에 적극 개입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고, 미중관계에 있어 ‘전략적 갈등과 협력’의 양면 중 ‘협력’의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
 - 새로운 미중관계는 ‘Pax-Americana 3.0’과 ‘중국의 부상 2.0’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로 적대적인 세력 균형과 조합된(associated) 세력균형이 동시에 맞물려 진행될 것임
 - 이러한 시기에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면밀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융통성 있게 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미·중과 다 같이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글로벌 중견국가를 추구해야 함
- 중국과는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모색하는 ‘연미협중’ 전

략을 추진해야 함

- 공동 목표의 핵심은 북핵 문제이며, 추후 북한 문제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핵 안전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지니고 있는 시진핑 정부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행동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그간 중국 측이 금기시했던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한 대화도 시작할 필요 존재
-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중동맹론은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나,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대북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관계’로 한중관계 격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는 중국이 이미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체결한 관계이므로 한미동맹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님

〈표 1〉 미·중 복합관계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전략방향 변수	연미통중 (聯美通中)	연미화중 (聯美和中)	연미협중 (聯美協中)	연미연중 (聯美聯中)
기간	이명박 정부 시기	박근혜 정부 시기 (2013~2017)	2015~2030	2030~2049
미중관계	미국의 우위	미국의 군사력 우위, 미·중 경제력 균형	미국의 군사력 우위 유지, 중국의 경제력 우위로 전환	미·중 군사력 균형, 중국의 경제력 우위
국제체제	미·중 갈등과 협력의 모색 시기	복합적인 미중 갈등과 협력 시기	미·중 전략적 경쟁 시기	미·중 전략균형 시기 다극 체제 형성
국제체제 내 중국의 부상	한미동맹 기반 위 역내 우호증진 노력. 중국과 구동존이 (救同存異)의 모색	일변도 외교 지양, 중국과 구동축이 (救同縮異) 추구, 중견국가 협력의 모색 및 추진, 미·중과 양자 전략대화 강화	한미 전략동맹 운용, 중국과 공조의 심화,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중견국가 협력의 제도화	동맹 외교의 탈피와 다자안보체제 강화. 중견국가 협의체의 적극적 운용
북한체제 위기	한미동맹, 대일 협력 공고화 및 대중·대러 외교 강화	한미동맹 유지 및 대중 및 대일 협력 외교 강화, 대북 한·중 전략대화 추진	미국 및 중국과 양자협력 기반으로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운용	미·중과 전략 대화 심화, 한·미·중 3자협력의 안정화, 평화적 통일 실현

**대북 안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중관계를 현재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할 필요가 있어...**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적어도 사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

다. 중국과 적극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도전을 기회로 전환

- 시진핑 시기 중국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이익관계도 구체화하면서 상응한 대응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는 우리 외교에 양날의 칼을 제공하는 것이며, 미래 외교안보경제 관계에서 한중 간 불안정성도 크게 증대하고 있음
- 중국이 제시한 친(親)·성(誠)·혜(惠)·용(容)이라는 대주변국 외교 이념은 공세적이라기보다는 대미 수세적인 연횡(連橫) 전략에 가까움. 단, 마지노선)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중국의 마지노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보다 신중한 대중 외교의 필요성도 동시에 주목해야 함
- 우리는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도 ‘대중국 견제와 경쟁’ 전략에 방점을 두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어떻게 ‘중국과 함께, 중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라.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

- 현재 한중 간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해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은 주한 미군에 대한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 해상경제회정(이어도 포함), 북핵과 연관된 북한 문제일 것임
 - 중국은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를 미국의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의 일부이며, 중국의 주요 핵심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음
 -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고립된 일시적인 사안이 아니며, 북핵 문제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선 보다 전략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러시아는 중국보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중국의 입장에서 X밴드 레이더의 운용이 중국에 적대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새로이 강조되고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한중관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커다란 파란을 맞을 개연성이 다대함
 -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마지노선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요하며, 적어도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이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이 요구됨
- 실제 사드 도입 문제는 미·중이 우선적으로 전략 대화를 통해 다뤄야

할 문제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적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미·중 대립이 아닌 협력 사안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을 통해 러시아를 억제하고, 중·러가 한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추진할 개연성을 차단해야 함.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대북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에 대응하게 할 것이며, 이는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향후 통일 문제 대응에도 큰 장애를 초래할 것임
- 특히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한 중국의 새로운 주변국 외교정책은 한국이 감내할 비용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탄탄하고 지속적인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할 때
비로소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과 외교에서
진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어...**

**마. 북한 문제 주도권 확보는 대중 레버리지를 강화하나,
현 단계에서는 국제공조가 우선시되어야 함**

- 탄탄하고 지속적인 남북한 관계를 지렛대로 할 때 비로소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과 외교에서 진정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단, 현 국면에서 국제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5.24 조치 등 대북 국제공조를 파기하거나 약화하는 것은 추후 우리 외교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개연성 다대
- 현재 드물게 한국·미국·중국이 대북인식을 같이하고 북핵에 대해 압박하는 국면이며 이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단기적인 남북관계 개선보다 중요함

❖ 저자 약력

■ 김흥규

現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서울대 외교학과 학사 및 석사, 2002년 미국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국립외교원 및 성신여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 외교부 및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기획 및 감수: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강현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강윤미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